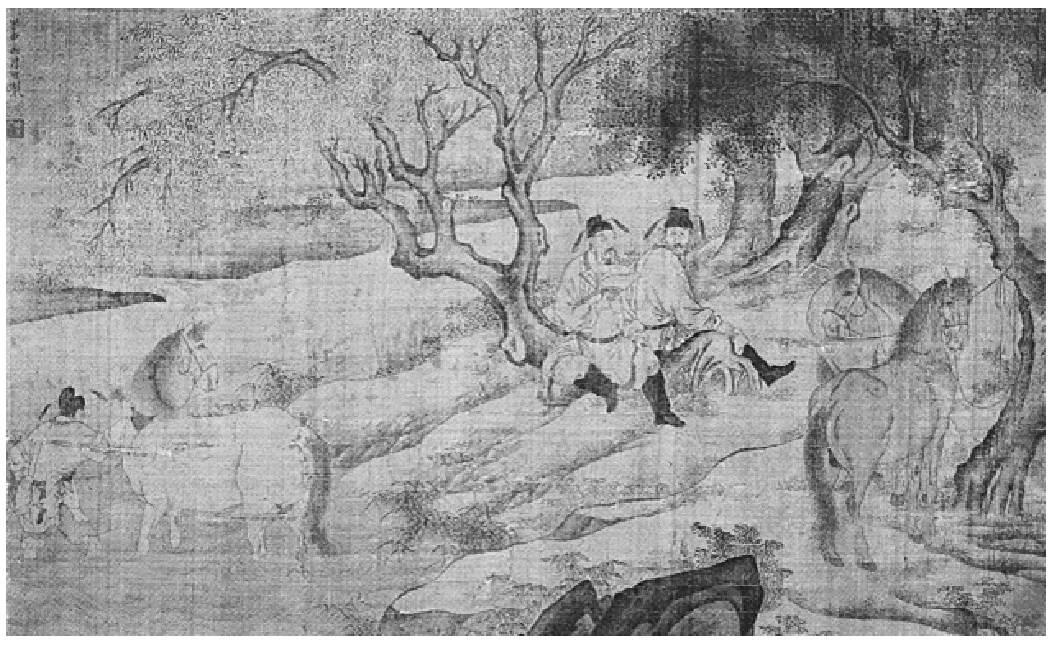
윤두서 '세마도' 진본 321년만에 전남수묵비엔날레서 일반에 공개



공재 윤두서 작 '세마도'. 〈전남도 제공〉

논문·도록 이미지로만 소개 학술계·미술계의 관심 집중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1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제4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간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가 321년 만에 최초로 일반에게 전시된다.

'세마도'는 현전하는 말 그림 중 제작 연대가 기록된 기년작(記年作)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작품 왼쪽 위에 '갑신유월일제(甲申六月日製)'라고 쓰여 37세(1704)에 제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사무국 설명이다.

말을 매어두고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두 명의 관리와 강에서 말을 목욕시키는 마부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사무국은 그동안 해남 윤선도박물관 내 수장고에 보관중이었다고 했다.

그동안 학계 논문이나 도록에서 일부 이미지로만 소개됐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학술계·미술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작품 오른쪽 상단에는 '공재지기(恭齋之記)'라는 주문인(朱文印)이 찍혀 있고 왼쪽 관서 밑에는 '청구자(靑丘子)'와 '효언(孝彦·윤두서의 자)'이 낙인돼 있다.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은 "수묵비엔날레가 수묵 예술의 철학과 문화적 깊이를 재조명하면서 관람객들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해남권(고산윤선도박물관·땅끝순례문학관) ▲진도권(소전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 ▲목포권(문화예술회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천만원 이하 연체빚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 이력 지워준다

정부, 324만여명 '신용 사면'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324만여명으로, 이 중 약 272만여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으며, 신용평가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이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계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중첩된 상황임을 감안해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개시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인 점도 고려해 성실상환자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연체 액수인 5000만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8주간 귀어학교 운영

교육생 20명 이론 교육·현장 실습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3기 20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8주 간 귀어학교를 운영한다.

귀어학교는 3주 간의 이론 교육과 5주 간의 현장 실습으로 진행되며 현장 실습은 어업 기술 뿐 아니라 현지 어업인과의 소통하면서 어촌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 실습 기간은 기존 4주에서 5주로 확대됐다.

8주 간의 교육을 마친 수료자에게는 2주 간의 보수 교육을 추가로 제공해 어업 실무 능력을 높인다. 현재까지 귀어학교를 수료한 201명 중 96명(48%)이 어촌에 정착했다. 전국 8개 귀어학교 중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과학원 설명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예비 귀어인이 전남 어촌에 정착, 지역 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국회 사무처, 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용역 착수

2026년 5월까지 당선작 선정

새 정부들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착수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제22조 4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자리잡을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 후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5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과정에 국민 주권의 가치 철학과 탄소중립 실현 등이 포함된다.

당선작이 선정되면 국민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전시, 시상 등이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15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핵심 과제인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예스24 랜섬웨어 공격 7시간만에 서비스 복구

해킹 두 달 만에 또 사이버 공격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해킹당한 지 두 달 만에 또 사이버 공격을 받아 먹통이 된지 7시간 만에 재개됐다.

예스24 관계자는 11일 언론과 통화에서 "오늘 새벽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새벽부터 예스24의 전자책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오전 9시 무렵부터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예스24의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할 수 없다.

예스24의 서비스는 약 7시간 만에 재개됐다.

예스24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고 발생 직후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즉시 시스템 긴급 차단 및 보안 점검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예스24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지역 도서관 전수조사…역사왜곡 도서 적극대응

광주시가 리박스쿨 등 역사왜곡논란 도서와 관련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복 80년, 역사왜곡 도서 관리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리박스쿨 등 역사왜곡논란 도서에 대해 자치구,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일부 교육현장에서 늘봄강사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한 도서 등 사실 왜곡 논란 도서가 시중 도서관에 비치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광주시가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각 기관은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왜곡논란 도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왜곡도서에 대해서는 임시로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의 도서가 발견될 경우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대출제한,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